

10·27법난 30주년 기념사업 본격화

법난피해명예회복심의위 동대의료원 검진병원 지정... 9일 기념법회·심포지움

10·27법난 30주년을 앞두고 법난 피해자를 위한 검진지정병원을 선정하는 등 기념사업이 본격화 됐다.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원학, 이하 명예회복심의위)는 10·27법난관련 법령의 의료급 산정 및 피해 상이자 검진을 위한 검진병원으로 일산 동국대학교 의료원을 1차로 지정하고 9월 29일 동국대 일산병원 원장실에서 검진지정병원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이명목 동국대 의료원장과 명예회복심의위 박훈신 지원단장, 이진호 병원장 등이 참여했다.

명예회복심의위는 피해신청자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 전국에 있는 국립종합병원 및 의과대학 부속병원 중 8~10개소를 검진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명예회복심의위 이성덕 의료정책팀장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 개인의 신



10·27법난명예회복심의위는 검진병원으로 일산 동국대 병원을 1차로 지정하고 9월 29일 동국대병원 원장실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왼쪽 세번째부터 명예회복심의위 박훈신 지원 단장과 이명목 동국대 의료원장.

칭이 필수적이다"며 "피해상이자 스님들이 반드시 신청해 명예 회복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상처도 치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국대병원 원무과는 "당시 피해상이자 스님들을 검진해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많고, 당시 연행수사 과정에서 입은 골절로 30년간 후유증을 안고 산 경우도 있다"며 "많은 분들이 치료에 신청해 보상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명예회복심의위는 신청기간을 2010년 3월 17일까지 연장해 피해자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으며, 명예회복 신청과 의료지원금 신청으로 구분해 신청 받고 있다.

법난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은 의료지원금 신청자 중 10·27법난과 관련된 질환을 대상으로 검진지정병원에서 검진을 거친 후 위원회에서 향후치료비, 개호비(개인간호비용), 보장구(보호 장구 구입)구

입비로 구분, 심의·의결해 피해상자에게 지급한다.

명예회복심의위의 중점사업인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을 위한 역사교육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역사교육관 부지선정 위원회' 구성 회의가 9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조계종과 명예회복심의위는 오는 10월 9일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 기념법회와 학술심포지움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다. 또, '연료보도'를 통해 본 10·27법난의 진실을 주제로 10월 9일부터 27일 까지 당시 오도된 언론 보도내용과 사진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전시장에 전시한다.

이번 행사는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불교계만이 아니라 국가가 지원하는 공식적인 첫 번째 행사라는 데 의미가 있다. (02)748-5555

박선주 기자 sunjoo0802@naver.com

목조문화재 65.5% 화재보험 미가입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 밝혀...장경판전 등 포함·보험가액도 미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해인사 장경판전(국보 제52호) 등 국보·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65.5%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험에 가입돼 있다 해도 보험가액이 실제 평가액의 3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9월 27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7월 말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화재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국보·보물 151건 중 99건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보·보물 130건 중 국보는 14건 중 화재보험에 가입된 문화재는 24%인 31건

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경남 합천의 해인사 장경판전과 국보 18호인 경북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 국보 67호인 전남 구례의 화엄사 각황전 등이 화재보험에 들어 있지 않았다.

국보 14건 중 화재보험에 가입된 예는 금산사(국보 62호, 전북 김제)와 진남관(국보 304호, 전남 여수), 통도사(국보 290호, 경남 양산) 등 3곳에 불과했다.

보험가입이 됐어도 훼손 시 보험보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보·보물 130건 중 국보는 14건 중 화재보험에 가입된 문화재는 24%인 31건

중요 보험가액은 35억원이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공·능 소재 20건만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사적 180건과 중요민속자료 148건은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보험회사 가입통계자료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형환 의원은 "지나해 승려문화재로 인한 국민적 상실감이 큰 상황에서 문화재청과 관련 지자체의 화마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화재로 인한 문화재 소실 혹은 훼손 시 복원을 위한 사후적 차원을 위해서라도 문화재의 화재보험 가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동성 기자

4대강 사업 저지 위해 위헌 소송

불교환경연대 등 4대강사업저지법대위 국민소송 추진

불교계와 시민·환경단체들이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위헌 소송에 나선다.

불교환경연대를 비롯한 4대강사업저지법대위는 4대강 사업 위헌소송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9월 30일까지 모집하고 국민소송을 추진한다.

모집된 법률지원단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10월 초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시행령을 개조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과 주요소송제소, 사업중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한다.

이번 국민소송이 추진된 배경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령 13조 2항(△재해예방·복구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내용에 문제가 있

기 때문이다.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예비 타당성 조사면제 조항을 만들어 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을 정부 스스로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든 상태다.

이는 헌법 75조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법률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4대강저지법대위는 "4대강 정비 사업은 사업근거와 타당성이 없는 물론, 관련 법과 절차가 무시된 채 추진됐다"며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는 무용지물이 됐다.

국가재정사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 왔던 예비타당성조사 90%를 면제받았으며 이것은 국가재정법시행령의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경남지방 종교인들이 낙동강을 지키기 위해 손을 잡았다. 부산경남종교평화연대(공동대표 도관)는 9월 28일 부산역 앞 광장 앞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지키기를 비롯해 종교간 평화연대와 대북 민간지원 등 사업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종교평화연대는 생명 평화에 대해 소명표와 함께 '낙동강 지키기 실천사업'으로 각 사찰과 교회, 성당 등에 홍보 팸플릿을 걸고 스님, 목사, 신부 등 각 종교인들이 릴레이 사업은 사업근거와 타당성이 없는 물론, 관련 법과 절차가 무시된 채 추진됐다"며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는 무용지물이 됐다.

박선주 기자

불교와 젠더 포럼

나무여성인권상담소, 8일

불교계 내부의 성차별에 대한 성찰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소장 김영란)는 10월 8일 오후 3시 불교역사박물관 2층 소회의실에서 '불교적 수행과 여성주의의 만남'을 주제로 제1회 불교와 젠더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불교는 과연 여성 친화적인가?' '불교적 수행은 어떻게 여성주의와 만날 것인가?' 등의 주제로 고미라 박사(이화여대 여성학)가 강의를 진행한다.

포럼을 통해 여성의 인권·사회적 지위향상에 따른 불교계 내 성찰 인식 요구에 부응하고 왜곡된 교리 해석 및 제도를 살펴볼 전망이다.

김영란 소장은 "교리, 제도, 문화 속에서 성평등적 여성관을 확립해 단식기도, 종교 합동기도회와 학술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기로 했다. (02)732-1367 이상연 기자



미래불교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지율 스님 동아일보에도 승소

"과장보도에 언론 자유 없어 배상" 선고

'천성산 지킴이' 지율 스님(사진)이 조선일보에 이어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9월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판사 최한돈)은 지율 스님이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동아일보는 지율 스님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아일보는 칼럼과 사실을 통해 '천성산 터널 반대 운동'으로 인한 손실액을 2조 5000억원으로 보도했다"며 "언론사의 사실·칼럼이라도 과장·왜곡했다면 특별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줄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와의 판결 뒤 지율 스님은 홈페이지(초록의공명, www.chorok.org)에 올린 글을 통해 "법에 대해 문의하면 내가 밤새워 발리를 뒤져가며 썼던 법정이었지만 승소 후에도 여전히 마음 내려놓을 곳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율 스님은 "이 소송을 통해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배운 준칙들이 아무런 소송이 없는 지점이 폭넓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9월 22일 조선일보가 항

청소년 불교교리 경시대회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새로운 희망의 물꼬를 터뜨린 제1회 전국청소년 불교교리 경시대회 시상식이 9월 26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 150여 명을 포함해 교리경시대회를 주최한 온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 자승 스님, 주관 단체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정련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혜승 스님, 파라미터청소년협회 이사장 도후 스님,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장 혜원 스님, 화엄학림 학장 법인 스님, 중앙총회의원 성호 스님, 무지 스님, 덕문 스님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연 기자

시조문학 작가상 수상!!

대우스님 禪詩
그대 그리운 날

어느 가을날

詩人 대우

어떻게 지내냐는 안부를 묻길래
세월에 놀라 버리고 떠날 줄 아는
낙엽을 붙들고 있다고 손 내밀었네

고요도 몸져누운 뜨락에 지는 낙엽
그 무게 얼마인지 궁금함을 눈짓해
바람에 가서 물어보라 말해 주었네.

그대 그리운 날

이아출판사

대우 스님

- 1959년 출가 입산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교무, 포교, 총무부장, 정화개혁 포교원장, 불교방송국 상무, 경찰청 경승실장, 종회의원, 승가대학 이사
- 선운사 분사, 내소사, 은적사, 실상사 주지 역임
- 제29,32대 조계종 총무원장 입후보
- 군종담당관, 향승위원장, 경승단장, 시정자문위원, 방송자문위원, 청소년선도위원, 교정교화위원장, 법사, 불보신도 주필, 한국서학 회원
- 저서 : 「길을 묻는 이에게」, 「생사」, 「어둠을 비집하며」, 「인연있는 이들에게」, 「반야심경」, 「한 생각 쉬면, 외 다수」
- 서울신문사, KBS한국방송공사, 법무부 제정 제7회 교정대상 수상, 대통령상 수상, 국가유공자, 시조문학 작가상

생명의 나라 진리의 고향 우주의 주인
백련참회굴 백련선원 대우 합창 010-2625-3307

법보시 문의 받습니다